

제공일자	2009. 2. 13(금)	담당자	진익 실장
홍보담당	김 진 익 선임(368-4413)	연락처	368-4461

총 2매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보험연구원(원장 : 나동민)은 “향후 경기침체로 신용경색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적보증기관이 기업 자금조달 관련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적보증기관이 포함된 금융위기관리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공적보증기구 통한 기업 자금조달 관련 신용위험 인수

- 필요시, 무한대의 보증한도와 100% 보증을 적용 -

이 보고서는 실물부문 부실과 금융부문 부실 사이의 악순환 형성을 억제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임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공적보증기구가 신용위험을 인수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자가 신용위험을 제3자에게로 전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민간부문에 적체되어 있는 유동성이 기업부문으로 순환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민간 중심의 신용위험 전가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공적보증기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서 기존 공적기관들(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의 현행 기능을 확대하여 기업 자금조달 관련 신용위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공적보증기관의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공적보증펀드를 조성하고 동 펀드가 신용디폴트스왑(CDS)의 거래상대방이 되어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당국이 판단하여 신용경색 현상이 심각한 부문에 대해서

는 은행대출이나 회사채발행 시 보증을 제공하면서, 무한대의 보증한도와 100%의 보증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문별(금융, 기업, 가계) 위기현황을 진단 결과, 금융부문의 경우 경영여건이 취약한 서민금융기관, 부동산관련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부문의 경우, 조선, 건설, 운송 산업과 소규모 기업, 내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문의 경우, 향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득감소와 자산가치 하락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기준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은행의 부분적 국유화, 배드뱅크 확대, 가계 소비부양을 위한 유동성 일괄지급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이 보고서는 현행 관행적 금융위기관리체계로는 금융시스템위기를 거시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금융위기관리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시스템위기의 정의와 관리원칙을 법제화하고, 금융시스템위기 발생여부를 판정하고 사후처리를 담당할 주체와 절차를 법에 규정하는 한편, 동 주체에 대한 책임, 업무범위, 권한 등을 사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와 더불어 공적 보증기구도 금융위기관리체계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